

북한 핵보유 선언 이후: 새로운 대북정책 준비해야

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 정책실장 / 핵전문가)

1. 북한의 의도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의 성명은 사실상의 “핵보유 선언”으로써 “불확실 전략(strategic ambiguity)”에서 공개 핵보유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여 중대한 선을 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한 이면에는 다양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제4차 6자회담에 열리더라도 부시 정부로부터 원하는 반대급부를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벼랑끝 전술”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이번 성명이 대화의 파멸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북한스스로도 원하는 조건이 성숙되면 대화에 나올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대화를 여지를 남기고 있다.

둘째, 체제와 정권의 위협을 느끼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북한은 독재체제의 경직성과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내폭(內爆)의 위험성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등 체제를 위협하는 외부요인들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중국이 미국에게 동조하는 경우 운신할 공간이 급속히 줄기 때문에 평양당국은 불안한 심정으로 미국이 중국의 협력을 획득하기 위해 외교적 접촉을 강화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미국이 평양정부의 교체 또는 북한정책의 “변형(transformation)”을 시도하고 중국이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북한에게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셋째, 북한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수순이기도 하다.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으나, 부분적으로 맞을 뿐이다. 북한은 방어적 목적 뿐 아니라, 내부통치, 외화가득, 대남 전략적 우세 등 다양한 동기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왔다. 북한은 반세기 동안 정권의 운명을 걸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왔으며, 북한 각지에 방대한 핵시설들이 산재해있다. 이러한 사실이 핵포기가 전혀 불가능함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핵포기의 대가로 대단히 많은 것을 원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이번 성명에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바에는 핵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요약컨대, 2. 10 성명은 북한의 주민의 삶의 질을 희생하고서라도 인권부재의 독재체제와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평양정부의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핵보유 선언은 국제사회에게 대북제재를 위한 충분한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은 더 깊은 고립과 궁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지만 체제와 정권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으니 건드리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2. 북한의 핵능력

북한의 핵능력은 1992년 이전에 생산한 플루토늄, 2003년 1월 핵동결 해제 이후 생산되고 있는 추가 플루토늄, 비밀 농축활동을 통한 우라늄(HEU) 생산 등 세 부분에서 비롯된다. 이 중 첫 부분은 당시에 핵폭발장치(nuclear device)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어쨌든 북한이 수 개의 플루토늄탄을 가진 것에 더하여 우라늄탄 개발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핵실험이 없는 상태의 조잡한 수준이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동떨어진 무책임한 낙관론이다. 남아공화국이 핵실험 없이 핵폭탄을 만들어 보관했었다는 사실이나 이스라엘이 핵실험 없이 방대한 핵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핵실험의 유무는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다. 또한 아무리 조잡한 수준의 핵무기라 하더라도 여전히 엄청난 살상력을 발휘한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진 역사상 가장 초보적인 우라늄탄 “꼬막소년(Little Boy)”과 8월 9일 나카사키를 강타한 최초의 플루토늄탄 “똥보(Fatman)”는 수 십만명을 죽이고 두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조잡한 핵무기론”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다.

투발수단 논의에서도 허점이 많다. 정보당국자는 “비행기 투하는 가능하나 미사일 탑재는 불가능하다”라는 추정을 내놓고 있는데,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 비행기로 구 소련이 제작한 IL-28 정도라는 점과 그런 항공기라면 한국영공을 넘어오는 순간 한국 전투기들이 요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다수의 위장 항공기가 동시에 출격했을 경우 한 대도 남김없이 요격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면 대답은 좀 달라진다. 미사일에 탑재된 핵무기는 요격이 어렵다. 북한이 핵폭발장치를 처음 제작한 것이 1992년 이전이라면 그 이후 소형화 및 미사일 탑재에 진력했을 터인데, 아직도 미사일 탑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이다. 고성능 화약과 티타늄 같은 가벼운 금속이 개발된 요즘에는 핵무기의 경량화는 비교적 쉽다. 이외에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한에 대한 위협수단으로 사용할 방법은 많다. 핵폭탄을 밀반입한 후 원격조정 방식으로 터뜨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투발수단의 유무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논의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날 수 있으며, 한국에게는 북한이 가

진 핵무기의 숫자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3. 전망

향후 북핵문제의 향방에 있어 최대 변수는 미국과 중국이며, 미국이 대응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중국의 대미협력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초강수를 선택한 북한이 금방 태도를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재선된 부시 대통령도 “강력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테러와의 전쟁,” “자유주의의 확산,” “독재정부의 소멸” 등 기존의 대외정책 목표들을 바꿀 것으로도 예상되지 않으므로 당분간 긴장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외교노력의 지속”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것을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 중인 대북 강경책 실행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 너무 일방적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평화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당분간 인내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핵보유를 고수하거나 요구 수위를 낮추지 않는 한 마찬가지일 것이며, 대북 제재를 검토할 것이다. 그 경우 반확산안보구상(PSI), 유엔안보리 회부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안보리 회부에는 상임이사국들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중국과 러시아의 찬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미국은 PSI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PSI는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들을 정선, 검색, 압류하는 일종의 해양차단작전(MIO)으로써 북한의 외화수입원의 상당부분을 봉쇄하는 강력한 압박조치이다.

현재 RAND 연구소 등에서 군사공격을 위한 시나리오들을 연구하고 있으나 당장 미국이 군사행동을 심각하게 고려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유엔안보리 회부, PSI 등 조치들이 있고 중국의 태도도 중요한 변수이다. 미국이 군사행동을 위협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군사행동을 실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이다.

중국은 상충되는 이해관계 때문에 고민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미국시장이 필요하며, 한반도에 새로운 핵보유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아 기존의 핵독점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이 향후 최대의 전략적 경쟁국이라는 사실 때문에 북한이 우호적인 완충국으로 남아주기를 바란다. 중국은 북한정권의 생존을 위한 보류로써 그리고 식량, 석유, 미그 전투기 부품 등 전략물자들을 제공하는 후원국으로서 북한을 설득하여 회담장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미국의 대북제재시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다. 중국을 주목해야 한다.

4. 북핵문제 장기화시 영향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정착하면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무기비확산 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보유를 선언한 북한은 비확산체제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제2, 제3의 북한을 탄생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된다. 동북아 차원에서도 일본의 군사현대화를 부추기고 새로운 핵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미일동맹 체제 하의 일본이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을 구실로 정보능력 강화,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강화, 정찰위성 발사(2003), 미-일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착수(1998) 등 조치들을 취했다. 주변사태법(1999), 대테러 특별조치법(2001), 유사법제(2003) 등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범위도 크게 확대했다. 북핵의 기정사실화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더욱 부추겨 중국과 러시아를 긴장시키고 대만의 비핵정책에도 파장이 미칠 것이다. 상응대응을 할 수 없는 한국은 전략적 왜소화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북핵의 기정사실화는 한반도와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직접적인 파장을 미친다. 북핵은 야포, 미사일, 화생무기 등 기존의 기습공격력을 증강하는 것이 되며, 남북간 군사균형의 변형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본격적인 핵무장을 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된 안보전략 및 군사교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화생무기 테러가 용이하게 되고, 저장도 도발의 기정사실화도 쉬워질 것이다. 북한이 백령도를 점령한 후 핵위협으로 탈환을 저지할 경우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혼란에 빠질 소지가 있다.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을 우려한 포기론과 탈환론이 맞서 결정과정이 표류할 수 있으며, 무결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도발의 기정사실화가 용이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대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다.

북핵 기정사실화는 대응방법과 관련한 한미간 이견을 심화시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민으로 하여금 핵을 가진 북한과의 전쟁을 기피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대한방위공약도 약화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과 미국 핵우산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강요할 것이다. 북핵을 방조할수록 대미 안보의존이 심화되고 자주국방의 공간이 좁아지는 것이 현재의 안보현실이다.

남북관계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이 핵을 완력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남북대화에서 한국은 수세적 자세에 내몰릴 수 있으며 이는 곧 상호호혜적인 남북관계가 저해됨을 의미한다. 한국 내부에도 논쟁이 초래될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상호간 핵무기 및 농축 재처리 포기”를 합의한 1992년 비핵화공동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으며, 한국정부의 “북핵 불용” 원칙을 퇴색시켰다. “왜 한국만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화를 통한 핵해결”을 표방한 정부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다. “先핵제거, 後대북지원”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대되면 남북교류도 위축될 것이다.

이렇듯 북핵의 기정사실화가 가져올 피해가 막중함에도 한국의 일부 젊은이들이 “북핵도 통일 되면 민족의 자산이므로 환영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음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북한만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 정착될 때 한국이 겪어야 하는 손실이 막대할 뿐 아니라, 북핵은 통일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민족적 역량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세력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핵을 가진 통일한국의 탄생을 반길 주변세력은 없다. 이 해괴한 논리는 결국 그나마 희미한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5. 한국의 정책과제

(1) 출발점: 좌표의 재설정

한국에서의 대북정책 논의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기보다는 개개인이 가진 이념적 좌표에 따라 특정한 정책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특정정책을 논하기 전에 먼저 각자가 이념적 판단을 요구하는 네 가지의 스펙트럼에서 자신의 좌표를 재확인해야 한다.

첫째, 북핵의 위협과 관련하여 당면한 전쟁 가능성(북핵을 시비할 때 발생하는 긴장이나 전쟁 가능성)과 북핵 방치시 후환(북핵을 방치하고 대북지원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핵을 가진 핵보유국으로 등장했을 경우 맞이해야 하는 위협) 중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는 결국 북핵이 “감기”인지 “암”인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건강을 유지하면 저절로 없어지는 감기와 같은 존재라면 햇볕론적 접근이 옳다. 남북간 교류협력을 지속하면 핵문제는 저절로 소멸되는 것이니 시비할 필요가 없다. 후일 역사는 감기를 두고 암인양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공연한 과잉대응으로 민족간 화해협력을 훼방한 사람들”로 낙인찍을 것이다. 반대로 실기하면 나중에 생명을 위협할 암을 감기인양 접근한 사람들은 “후환을 다음세대 떠넘긴 채 북한정부와 사이 좋게만 지내려 했던 사람들”로 기록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

둘째,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NPT 체제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이다. 핵확산을 예방함으로써 핵전쟁 방지와 인류의 안전에 기여하는 “천사적” 측면과 5대 핵강국에게만 핵보유 특권을 주고 나머지 나라들에게 핵을 금지하고 사찰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존의 핵독점 체제를 보호하는 “늑대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어떤 쪽을 중시할 것인가 하는 판단이 핵논의를 좌우한다. 늑대적 측면으로 본다면 미국은 자신이 대장인 핵질서를 지키기 위해

절치부심하는 욕심쟁이 핵패권국이며, 여기에 대항하는 북한은 강대국들의 핵독점에 도전하면서 약소국들의 서러움을 풀어주는 투사로 보인다. 한국 운동권 학생들의 핵논리는 모두 이 관점에서 나온다. 반대로 천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NPT 체제를 약화시켜 인류를 핵전쟁의 위협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나라이며 미국은 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로 보인다. 한국인은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어느 쪽을 중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중 어느 쪽을 중시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민족공조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한미동맹보다는 민족간 화해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동족이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안보위협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고 안보보장 위에서 대북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공조론자에게 있어 미국의 강력한 대북정책은 “민족 동질성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지만, 안보론자에게는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필요한 조치”가 된다. 북한이 “동족”과 “안보위협”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이상 이 논쟁은 필연적이다. 한미공조와 민족공조는 조화롭게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이나 현실적으로는 하나를 중시하면 다른 하나가 훼손되는 제로섬적 관계에 있다.

넷째, 한반도 핵위기의 원인에 대해 “북한 유죄론”과 “미국 유죄론” 사이에서 좌표를 재확인해야 한다. “미국 유죄론”을 믿는 사람들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한반도 핵문제의 원인”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수긍하며, 2002년 이후의 핵위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중유제공을 거부하고 경수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1994년 제네바합의를 어긴 것으로 믿는다. “북한 유죄론”을 믿는 사람들은 북한의 핵야욕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북한이 제네바합의 직후부터 농축을 시도하면서 사찰을 거부한 것이 미국의 중유제공 거부를 자극한 원인으로 본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거나 확산하지 않는 민주국가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 무조건적 “미국 유죄론”의 설득력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최근 한국사회는 이상의 스펙트럼에서 왼쪽 지점에 좌표를 두고 있었다. 정책이 반드시 그런 쪽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젊은층의 일각 또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목소리를 가진 많은 시민단체들의 좌표는 분명 왼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북한의 두 얼굴, 국제정치의 현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등을 두루 감안할 때 이 좌표들은 보다 오른쪽으로 옮겨져야 한다. 한국사회가 다양한 좌표들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지만 대북정책은 “60 대 40” 또는 “70 대 30” 정도로 오른쪽에 설정된 좌표들을 토대로 수립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곧 이상과 현실 중에서 현실을 좀 더 중시해야 한다는 얘기와 같다.

(2) 단기 정책과제

최대의 당면과제는 6자회담의 재개를 성사시키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결정적 지렛대를 가지지 않은 한국은 북핵문제의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종속변수인 측면이 많다. 그럼에도 회담재개 및 평화적 핵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경감된 것은 아니며, 한국이 제2,3차 6자회담에서 효과적인 중재역할을 수행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으로서는 북핵사태가 개선 또는 악화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양쪽 시나리오에 대비한 유인책과 압박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개선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는 더욱 구체적인 유인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일방적인 고백과 자진 핵해체를 의미하는 리비아식보다는 우크라이나 방식, 즉 Nunn-Lugar 프로그램의 북한적용을 제안해볼만하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우크라이나 양자간 및 미-우크라이나-러시아 삼자간의 복합적 합의구도에 의해 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으며, 1993년이래 약 7억불의 자금을 제공받으면서 2,000여개의 핵탄두를 모두 폐기하거나 러시아에 반납했다. 이후 원자력 안전과 첨단화에 박차를 가해 현재 서방형 원전도입을 추진 중이며 NATO와의 협력을 통해 서방세계 편입을 도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훌륭한 모델이다.

악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2의 대북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하는 국면이 전개될 경우 한국도 실질적 현금지원을 중단하고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 지지, PSI 찬성, 경수로 공사 영구중단, 미사일방어 계획 참여 등을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유인책은 압박책과 병행하여 제시될 때 최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이와 함께, 한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일종의 레드라인에 대해 미국과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합의된 레드라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미국은 한국의 대북포용을 인정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미국의 대한불신을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한미관계를 추스르는데 유효하다.

(3) 중장기 정책과제

북핵이 기정사실화된다면 한국으로서는 북한 핵무기와 더불어 생존하는 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싫든 좋든 한미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이나 핵사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물리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미 안보의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며, 북핵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력을 추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한국이 북한에 상응하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지만 첨단 재래무기 개발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함양하는 것은 국제적 제약없이 추진할 수 있다. 북핵이 기정사실화로 가닥을 잡을 경우 한국은 장기적 생존전략 차원에서 첨단 재래무기에 의한 비대칭대량보복전략을 검토해볼만하다. 즉, 핵전력이 아니면서도 북한의 지휘부, 정보중추, 통신시설, 전력시설, 산업중심지, 인구밀집 지대 등을 초토화할 수 있는 전략무기들을 확보함으로써 비대칭 보복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한국적 전략무기로는 공격용 미사일, 조기경보기, 군사 위성, 무인기, 정밀타격탄, 지하관통탄,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을 들 수 있다. 대량보복 전력을 유지 관리하는 새로운 부대조직의 창설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적인 과제인 만큼, 북핵문제의 추이나 국제정치의 향방을 종합하여 추진시기와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장기화시 한국은 장기적인 생존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비상대비 체제를 점검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상 국가는 위기발생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대처하는데 정부는 신속한 상황 인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을 수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본토안보부, 연방재난관리청(FEMA), FBI, CIA 등 이외에도 핵상황 발생시 대처하는 조직으로 국가핵안보청(NNSA), 핵비상탐색팀(NEST)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6. 맺는 글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외교적 노력의 지속”을 천명하고 있는 그리고 중국이 확실한 방향을 내비치지 않는 현 시점에서 한국정부는 대북정책 수정과 관련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나,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돌입하는 경우에도 “핵-대북지원 분리” 정책을 고수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 때 한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장래와 관련한 하나의 분수령이 될지도 모른다. 한국에게 있어서는 힘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직은 기대를 가지고 좀 더 노력해야 할 때이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써 대화를 통한 핵해결이 물건너 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북한이 “조건만 성숙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한 대화재개의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이 드라마틱한 연출을 빚어내는데 특별한 талан트를 가진 생존의 마술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타협을 연출해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서 간과해서 안될 몇 가지 유의점이 있다.

첫째,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1990년대초부터 북한이 펼쳐온 핵게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반대급부”와 “일정수준의 핵억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으려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 두개의 목적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북한은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어내려 하면서도 핵보유 집념은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둘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경우 “특별한 반대급부”를 원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미북간 의견의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생존을 보장해주기만 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데 왜 미국이 들어주지 않는가”라고 불평하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이들은 북한이 원하는 바의 “특별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포괄적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경제지원, 정치적 인정, 체제보장, 정권안보, 여타 대량살상무기 보유 인정 등을 모두 포함되어 있다.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포기 이후 화생무기와 미사일을 인정해야 하며, 인권부제의 부자세습 독재체제, 정치범 수용소, 탈북문제 등을 눈감아 주어야 한다.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조건”이다. “자유주의 확산”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내건 부시 행정부가 이런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6자회담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며, 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이 요구수준을 낮추지 않는 한 핵해결은 쉽지 않다.

셋째, 핵문제 미해결 상태에서의 시간경과는 한국에게 독약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서 몇 달 또는 몇 년이 경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에게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거나 핵무기의 소형화 또는 성능개선을 시도할 기회가 되며, 나중에 북한은 통제불능의 핵강국으로 등장할 있다. 북한의 언행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북핵문제의 본질이 북한정권의 체제유지 욕구에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수용하면 대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진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이면 “자본주의적 오염”으로 정권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으로 두려워한다.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핵해결 노력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 또는 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핵외교를 벌이거나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나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민주화와 개방화의 길로 들어설 때 진정한 축배의 잔을 들 수 있다.

<2005년 03월 03일 미래전략연구원>